

한라포커스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 호지부지속 공모만 반복

임명직 시장 한계속 개선의지도 부족

도, 12~18일 제주시·서귀포시장 개방형직위 공모
 “정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 시급” 목소리만 비등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또다시 중앙정부 등 1차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무늬만 시장'이라는 비판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시장 직선제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9월 정부의 입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위위원회가 특별도 도입 취지(조직 슬리화)에 역행한다며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정부 부처의 1차 관문도 넘지 못한 채 2020년 지방선거부터의 시행 목표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강창일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아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막바지 기대를 걸어보지만 폐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단위로 민선 7기 후반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모한다. 행정시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방형직위 모집을 거치며, 공모기간 및 접수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다.

향후 일정으로 도는 원서접수 후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해 제주도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이어 인사위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행정시장 후보를 추천한다.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를 지정한 뒤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도의회는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가 가려진다.

▶한계점 되풀이... 내정설도 '솔솔'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행정시의 위상이 하락하며 도민의 행정에

대한 체감도도 낮아졌다. 전제 예산은 줄어든 양상이고, 대신 인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은 늘어나며 도민 불편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업무 과부하로 불멘소리를 내고 있다. 예산과 권한은 제주도에 집중되면서 과중한 업무는 행정시에서 도맡아 하며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인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지난해 8월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

설했다. 결정권 없어 행정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예산·조례제정 요구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 보장도 요구했다. 행정시를 거점으로 43개 읍면동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위한 기본사항들임을 강조했다.

제주도가 행정시장을 공모한 가운데 벌써부터 내정설도 '솔솔' 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 나섰던 후보자가 제주시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행정시장의 경우 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력풀에 제한이 따르고 마땅한 인물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들은 행정제 개편과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많은 공약을 내세웠다. 도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 특별도와 행정시 간의 행정사무 및 권한 배분 갈등, 행정시장 예고제 활성화 등 기존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의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 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의 전면적 재검토와 그 과정에서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예산,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백영기기자



국도 최남단 마라도 관광 열풍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광객의 제주행이 러시를 이루는 가운데 2일 국도 최남단인 마라도에도 섬을 구경하려는 관광객들이 여객선 선착장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본격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1일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감귤 판촉 및 흥

보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 이달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1~3월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에 모두 1억2000만원을 투입,

유통처 다변화·소비자 기호 변화에 신속 대응 등을 통해 서귀포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우수감귤 판촉 및 홍보 사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영중기자 yihyeon@ihalla.com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생활방역'

정세균 총리 “모임·행사 방역지침 준수 전제 허용”

등교수업도 순차적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경제·사회 활동을 재개하며 생활 속에서 방역을 이어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며 “수요일인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4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데 이어 '황금연휴'가 종료되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이어왔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 전환 방침과 관련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다.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4일 교육부가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정부, 제주 제2공항 예산 320억 삭감

코로나19 추경 논의 과정에서 항공사업 등 연차계획 변경

올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던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주 제2공항 예산 32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위생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이를 위해 증액재원 4조6000억원에는 추가 세출구조조정(1조2000억원)을 통해 조달해 국채발생 규모를 최소화했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심사 시작 4일만에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편성했는데, 공공부문 지출 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2조4000억원 규모를 조정했고, 철도·국도·항공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산도 이같은 정부 지침에 따라 삭감이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비 324억원과 공항건설업무지원비 2000만원, 감리비 32억원 등 총 356억2000만원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상생방안을 마련, 올해 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이같은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부미현기자

5일 어린이날 신문 쉽니다

정부경영평가 2년연속 A등급 획득
 큰 기업을 넘어 훌륭한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with LH

내가 생각하는 주거복지는
 단지 집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거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LH는 비주택 거주자 모든 분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고자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주거복지 위해
LH가 지금 찾아가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이란?
 LH가 주거복지재단·NGO와 협력하여 폭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37만 전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하는 공공-민간 협력사업입니다.

LH콜센터 1600-1004